

##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이 승 역\*

1. 머리말
2. 당대 관점의 전략적 기록화 : 정부에서 사회로
3. 보존기록 획득 수단 : 대상과 시점의 목표 지향적 조합
4. 지속가능한 제도 : 규범화된 전략과 정책
5. 맺음말

---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주요 논저 :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한국기록학회, 2013.

▪ 투고일 : 2014년 9월 26일 ▪ 최초심사일 : 2014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7일.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사회의 대사전이나 주요 공공 정책에 관한 기록화를 위해 작동되는 보존기록 시스템에 관한 논의이다.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같은 시대에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기록화 전략의 개발이다. 여기에는 기록에 포함된 모습이 중요하며 여기에 가급적 넓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는 보존기록의 가치에 관한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그러한 전략에 해당하는 보존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다. 기록화 전략은 전략에 맞는 기록을 획득하는 별도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셋째는 이러한 기록화 전략과 기록 획득수단의 지속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행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 체제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거시평가, 기록화전략, 보존기록 수집수단, 국가기록화전략, 국가기록수집정책**

“보존기록 평가선별은 아키비스트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이다. 아키비스트들이 평가하여 선별한 기록유산으로 미래에 과거나 현재에 관해 알게 될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된다. 아키비스트는 이 임무가 중대함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철학적으로 고도의 민감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Terry Cook

테리 쿡 교수를 추모하며

## 1. 머리말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기록, 그것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기록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을 두고 한 국회의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렇지만 이전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발언의 사실적 뒷받침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소간 공감감이 있었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공적인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통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기록전문가 공동체에게도 일대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목적의식적인 행동계획을 통한 기록화가 부각되었다. 그런데 선박 인허가, 구조과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공공분야의 기록은 추모기록과 비교하면 사실상 이슈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등 외국에서 있을 법한 정부, 법원 또는 의회의 기록물 폐기동결 같은 조치도 물론 없었다. 2백여 조항이 넘는 공공기록관리법령에 정작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특별 입법이나 국가 개조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법 미비를 이유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추모의 기록화는 희생자와 가족 등 당사자의 서사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공공기록의 경우 이미 생산된 기록의 조사와 선별 그리고 향후 생산될 관련기록의 선행적 보존 조치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쓰일 기록을 모아 각각 생산기관의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양상이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치우침과 가감 없이 그 당대에 기록화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동시대의 목적의식적 기록화는 기록 평가선별론에서 비교적 근래 대두된 것으로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 관한 보다 폭넓은 맥락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아키비스트들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사안은 아니며, 사회적 대사건이나 주요 공공 정책에 관한 기록화를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거시적 평가선별 체제이다. 기록 평가선별에서 ‘거시적’이라 함은 기능, 이슈, 정책 같은 다량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배경적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구미의 기록관리분야가 이룬 학문적, 실천적 성과인 거시적 평가선별론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대사건이나 주요 공공정책의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 이행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이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 2. 당대 관점의 전략적 기록화 : 정부에서 사회로

기록이 현용(現用), 준현용에서 비현용의 주기를 갖는다는 이른바 기록 생애주기론은 20세기 근대적 기록관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고이다. 근대적 공공기록 관리의 선구자인 쉘렌버그(Schellenberg)에 따르면, 기록은 생애주기에 따라 생산목적의 현용단계가 종료된 후 아키비스트의 가치 평가를 거쳐 일부가 보존기록으로 선별된다. 이를 가치가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계속적 가치’ 또는 ‘지속적 가치’라고 하였다.<sup>1)</sup> 또 다른 근대적 기록관리 선구자인 젠킨슨(Jenkinson)은 아키비스트가 아닌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존할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보았다. 생

산자를 강조한 것은 기록 생산의 맥락에 기록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진본성(authenticity), 자연성 등 보존기록(archives)의 근본적인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sup> 그렇지만 이러한 기록 생산의 맥락은 당대 사회의 관점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켈렌스주의의 기록 평가선별에서 강조되는 ‘생산자’는 개별적인 생산 출처와 밀접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대의 사회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켈렌버그와 켈렌스는 그 차이보다 오히려 동일한 면이 부각된다. 이들 근대적 기록관리의 선구자들이 추구한 것은 정부나 국가에 관한 기록이었고, 일정기간 지난 후 연구 목적의 후대 활용이었다. 켈렌버그의 평가선별은 20세기 초 생산량이 막대하게 늘어난 연방정부 기록에 대해 현용이 끝나는 시점에 그것의 보존에 허용된 재원과 보존할 만한 가치가 만나는 접점을 찾는으로써, 설명 가능한 가치를 통한 기록 감축을 지향한 것이었다.

켈렌스의 경우도 초점이 정부에 맞추어진 것은 다르지 않았다. 다만 1920년대 켈렌스가 직면한 상황은 좀 달랐다. 즉, 국가 총력전이 불가피했던 미증유 세계대전 와중에 복잡하게 조직의 설폐(設廢)와 통합이 반복되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전시 대응 전말에 관한 사후 연구를 위해 가급적 생산된 그대로 남아 있는 포괄적 기록 집합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sup> 이른바 켈렌스의 ‘비평가주의’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

- 
- 1) 기록 생애주기에서의 기록 가치와 선별에 관해서는 켈렌버그의 고전적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Schellenberg, T. R.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National Archives Bulletin* Vol.8, Washingto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56, 오항녕 역,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29-47쪽.
  - 2) Jenkinson, Hilary,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22, 정부기록보존소 역, 『힐러리 켈렌스의 기록관리편람』, 2003, 10-13쪽. 두란티는 켈렌스의 저작과 영국 국가기록원(Public Records Office)에서 발간한 가이드를 토대로 보존기록의 속성에 여기에 상호연관성, 유일성을 추가하여 정의하였다. Duranti, Luciana,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Vol.59, 1996(오항녕 역, 앞의 책, 285-291쪽)
  - 3) Ridener, John, *From Polder to Postmodernism : A Concise History of Archival*

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전형적인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이 기록학 사이면이면서 한편으로 정부 관료였다는 점은 근대적 기록관리 시대의 공통점이었다.

근대적 기록 평가선별에서 ‘당대 관점의 기록 평가선별’은 두 가지에 관한 사고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는 기록의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과 사회의 관계이다. 가치론의 변화는 서술적인 범주로 개념화된 가치를 통해서도 보존할 만한 기록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이의 제기를 의미한다. 즉, 기록의 가치는 ‘증거’나 ‘정보’ 같은 개념적 실체가 아니라 실제 기록에 담긴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에서 찾으려는 것이 해당 기록이 만들어진 폭넓은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동시대 사회의 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록은 그 자체의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 특히,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그 의미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보존기록 가치론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주목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것은 공히 기존의 근대적 평가선별을 통해 남겨진 보존기록이 동시대 사회의 실상과 동떨어져 있고, 유력한 소수 세력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하였다.<sup>4)</sup> 즉 정보나 증거로서의 유용성에 입각하는 가치론으로는 동시대의 기록으로 사회적 모순 상황을 포착하는 것이 제한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외면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시기적으로는 20세기 후반 대두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적 냉전 체제의 이념갈등,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격차, 계층과 인종간 불평등과 불화가 격화되는 등 사회적 모순에

---

*Theory*, Litwin books LLC, 2009, p144. 젠킨슨의 『보존기록 관리편람』은 제1차 대전 기록의 보존을 위해 카네기재단이 의뢰하여 집필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기록보존소 역, 앞의 책, 5쪽.

4) Ham, Gerald,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Vol.38, 1973, pp 333-335. 주지하듯이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인식에는 『미국민중사』의 저자로도 유명한 진보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일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직면한 일부 보존기록 전문가들의 반성이기도 했다. 사회 상황에 민감한 이들 행동주의적 아키비스트들의 정체성은 단순한 기록학자나 정부 관료로서의 아키비스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먼저 거론해야 할 사람은 독일인 뵘스(Booms)이다. 뵘스에게 있어 기록의 가치는 기록 자체가 아닌 기록이 만들어진 배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였다. 여기에서 사회는 후대에 지나간 과거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거울에 담긴 사회를 당대의 시각에서 담는 것이었다. 동시대 사회에 실재하는 가치관이 담긴 계획적 기록화가 그가 생각한 기록 평가선별이었다.<sup>5)</sup>

뵘스의 입장은 198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나 캐나다의 공공기록 거시평가정책 등 북미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미의 동향 또한 당대에 대두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토양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 대두 당시 미국은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등이 가열되면서 국가가 실상 특정 계층, 인종, 성별, 종교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용광로로 비유되어 온 다문화국가 미국의 국가적 일체성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에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현재의 사회상이 투영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기록화를 목표로 다수의 기록보존기관이 협력하는 다기관적 기록화 행동계획을 추구하였다. 캐나다 국가기록원(LAC)이 정책으로 채택한 거시평가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가동중인 실체를 대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상호간 역동적 반응이 진행되는 현재를 기록화의 목표로 삼았다.<sup>6)</sup>

이러한 당대 또는 당대인의 관점이라는 공통적인 지향은 관련 문헌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었다. 즉, 뵘스의 ‘자료가 생성된 시대의 가치관’이나 ‘동시대 사람들이 자료에 부여한 가치’ 그리고 ‘기록이 생산되고

---

5)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 *Archivaria* Vol.24, 1987, 오항녕, 앞의 책, 159-221쪽.

6) Cook, Terr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25 No.1, 2004, pp.5-18.

실제로 이용되었던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사회 정치적 가치'가 그것이다.<sup>7)</sup> 또한 해크먼(Hackman)도 미국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대상을 '진행 중인 이슈, 활동, 기능, 주제'이라고 하였다.<sup>8)</sup> 캐나다 거시평가 이론가인 쿡은 거시평가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하여 '동시대적 또는 현재적 활용(contemporary use)'을 강조하였다.<sup>9)</sup>

당대 관점의 기록 평가선별은 국가나 정부 활동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후대의 관점에서 소급하는 역사 자료를 찾는 것보다 거리가 있었다. 국가 행정시스템로 운영되었고 학자들을 보존 기록의 최우선적 이용자로 우대한 근대적 기록 평가선별 체제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를 기록 평가선별에 있어서 진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당대 관점은 동시대 입장의 총합이 아니라 다수 입장 중 하나이고, 사실상 또 다른 편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립성이나 불편부당성을 기록 평가선별을 절대 관건으로 본다면 당대 관점은 그 자체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일은 더더욱 곤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아 개별 기관에 관한 증거나 후대 학술 연구를 위한 근대적 평가선별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기록 평가에서 당대의 상대적인 서사를 당위적으로 보는 것 또한 무조건 용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정기간 경과된 지나간 역사에 대한 객관적 조망 그리고 진행 중인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실천이라는 상반된 지향은 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현장 아키비스트로서는 특히 심

---

7) Booms,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오향녕 앞의 책, 216-217쪽.

8) Larry J. Hackman and Joan Warnow-Blewett,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Vol.50, 1987, p.12-13.

9) Cook, Terry, "Macroappraisal in Theory and Practice: Origin, Characteristic, and Implementation in Canada, 1950-2000," *Archival Science* Vol.5, 2005, pp.101-102.



각한 고민거리임이 분명했다.

이 같은 딜레마는 기록화 대상에 관한 논의가 국가나 정부에서 사회로 옮겨감으로써 나타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평가선별에서 객관성만큼이나 선택적 가치관이나 윤리 문제에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기록 평가선별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쿡(Cook)의 지적은 평가 아키비스트들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이나 자발적 실천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동시대의 한복판에 있어도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모색하는 것은 당대의 기록화를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부진한 집단과 개인은 끌어올리고 반대로 과도함과 치우침은 조정함으로써 가급적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지향하는 절차화된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은 일반론으로 지속적 환류를 가능케 하는 기록화의 전략적 범주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전략적 기록화를 위한 세 가지 범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가장 추상적이며 포괄적 범주로서 동시대 사회의 당대적 가치의 등가물로 실재하는 현상적 실체이다. 이는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하나의 기록된 서사의 형태로서 전략적 기록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학술연구, 언론, 정치, 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동시대의 사회적 공론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공공정책, 사건, 문화적 현상, 기타 사회구성원들의 특성적 가치관 등이다. 첫 번째 범주는 그 구현에 있어 내용분야와 그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10) Cook, Terry, "Remembering the Future :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Francis X. Blouin Jr. and William G. Rosenberg Ed., *Archives,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 Essay from the Sawyer Semina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6, pp169.

두 번째 범주는 첫 번째 범주와 관련하여 그에 부합하는 기록이 위치하는 곳이다. 정부 등 각종 공적 기관이 우선 대상이겠지만,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 조직화된 집단 전반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록된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나 그것의 영향권에 있는 실체가 대상인 것이다. 이는 특정 기능에 관해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캐나다 거시평가의 'OPI(Office of Primary Interest)' 개념과 유사하다. OPI는 특정 기능과 관련하여 영구보존할 기록이 존재하는 위치를 말한다. 캐나다 거시평가에서는 도출된 추상적 가정이 구체적 기록을 통한 검증으로 완료되는 거시평가에서 주출처가 중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sup>11)</sup>. 두 번째 범주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첫 번째 범주의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부연하면 전략적 기록화라는 서사 형식의 추상적 가설을 실제 생산된 기록으로 검증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두 번째 범주가 중요한 이유이다.

세 번째 범주는 첫 번째 범주에 부합하는 기록들이 파생되는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용과 갈등, 조정의 양상에는 동시대의 특성적 양상을 당대 관점에서의 이해가 투영된다. 두 번째 범주인 출처로서의 기록 위치가 기록이 만들어진 직접적 목적에 관한 것이라면, 상호관계나 작용으로서의 기록 위치는 관계와 작용의 동역학이 투영된 다중 출처, 주체로부터의 기록을 포괄한다. 캐나다의 거시평가에서도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의 관계의 동역학(動力學)에 관한 기록화를 강조하였는데,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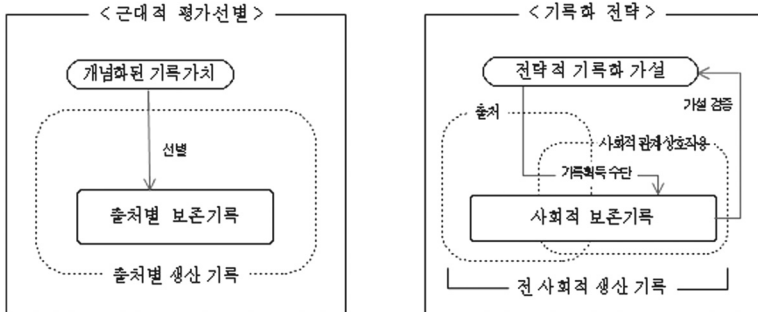
11)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ppraisal Methodolog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part A : Concept and Theory," 2001. 이 글은 캐나다 국가기록원(LAC)이 수행한 2004년의 업무재설계 산출물로서 공식문서이다. 실제로는 쿡이 2000년 작성한 것으로 2004년 갱신된 것이다.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이승익,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 적용시론」, 『기록학연구』 14, 한국기록학회, 2006, 129-135쪽.

것이야말로 기록화의 대상이 국가에서 사회로 옮겨가는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전략적 범주가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기록화 전략의 대전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머지는 그러한 대전제의 기조에 따라 포착되는 특정 조직, 이벤트, 상황 그리고 관계로서, 기록화 전략에 부합하는 기록들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출처로서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논리적 위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상의 기록화의 전략범주들은 공공분야 기록화전략을 하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틀이다.

전략적 기록화는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 사회적 범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보존기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출처영역 안에서 개념화된 가치를 통해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근대적 평가선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일단 기록화 전략이 세워지면 그 내용이 다양한 획득 수단으로 확보되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이렇게 획득한 기록물은 다시 기록화 전략을 검증하여 확정하는 환류과정으로 진행된다. 근대적 보존기록 평가선별과 기록화전략을 그림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근대적 기록평가선별과 기록화전략 비교



근대적 보존기록 평가선별은 개념화된 가치의 등가물로서 기록을 평가하여 선별하는 다시 말해,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다. 이에 비해 기록화 전략은 개념화된 가치나 속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특정 기록이 아니라 기록에 투영되어 있는 이면의 사회적 상황이나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다. 이러한 이원적 과정은 전략적 기록화가 근대적 평가선별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 3. 보존기록의 획득 수단 : 대상과 시점의 목표 지향적 조합

기록화 전략의 가설적 기록화 단계는 그 논리적 타당성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으로 실물 기록을 확인하여 획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폭 넓은 사회적 맥락을 포착하는 전략적 기록화 가설 정립 과정 그 자체는 일단 기록이 생산되어 유지되는 현장과 상관없이 시작될 수 있다. 사회와 보존기록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아키비스트들은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기록화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지만 가설적 기록화를 전제로 하는 기록화 전략의 이행에는 실물 기록의 획득이라는, 근대적 기록 평가선별에서는 별 이슈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대두되었다. 쿡과 같은 유력한 거시평가론자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보존기록 획득과의 단절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sup>12)</sup>

폭넓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출처단위를 넘어 사회 전역에 존재하는 다수의 기록 소재처를 포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콕스(Cox)가 보고한 서부뉴욕 사례처럼 다수의 기관이 하나의 전략적 기록화를 전제로 각각의 기록 평가선별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80년대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화를 위한 주제

12) 이승억,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 적용시론」, 『기록학연구』, 14, 한국기록학회, 2006.

(subject)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문제점이 나타났다. 즉 주제의 임의성으로 인해 전략 이행 주체들간에 논란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의사결정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sup>13)</sup>

캐나다의 거시평가는 실재하는 실체로서의 기능분석에 기반함으로써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sup>14)</sup> 그렇지만 캐나다 거시평가 또한 비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비판의 요점 또한 거시평가가 기록 생산현장과 괴리되어 추상적이고 어려우며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것이었다. ‘전통주의자’인 이들 반대론자들은 기록 평가선별 본래의 견지에서 기록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sup>15)</sup> 캐나다 ‘기능주의자’들은 이러한 전통주의자들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2004년 캐나다 국가기록원이 수행한 업무재설계 산출물을 보면, 전통주의자들이 비판한 기록 생산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거시적 기능 분석결과를 생산된 기록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생산기관 친화적인 도구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16)</sup>

- 
- 13) 서부뉴욕지역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에서는 기록화 대상인 주제를 정하는 앞 단계에서 많은 역량을 소진해 버렸다. Cox, Richard, J.,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Vol.52, 1989, pp.192-200.
  - 14) 쿡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가진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제 기반의 기록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Cook, Terry,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Vol.34, 1992, pp.181-91.
  - 15) Beaven Brian P. N., " 'But am I Getting My Records?' Squaring the Circle with 'Terms and Conditions' Expressed in Relation to Function and Activity," *Archival Science* Vol.5, 2005 pp.315-341.
  - 16) 2004년 11월 완성된 LAC 기록평가처분업무 업무재설계(BPR) 산출물을 보면 LAC가 생산기관과의 동반자관계 창출, 편의성 높은 처분계획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 평가처분프로그램은 고객 기관에 초점을 두고 결과 지향적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행정적 수사로 볼 수만은 없다. LAC가 거시평가정책이 어렵고 이행이 쉽지 않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캐나다 업체설계 산출물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나영선,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현황에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전략적 기록화에 부합하는 기록 확보는 기록화전략의 가설을 세우는 것과는 별도의 방법과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략적 기록화는 기록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담겨야 할 어떤 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기록이 만들어져 유지되는 개별 현장과 바로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캐나다 거시평가에 대한 업무재설계에서도 전략적 기록화를 대전제로 하면서도 전략에 부합하는 기록의 확인 및 획득을 구분하고 후자는 그 나름의 최적의 방법과 기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 기록화 전체의 성공 관건으로 간주하였다.

기록의 획득은 기록이 실재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하게 대상화된 기록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출처'이다. 공공분야의 기록은 일정한 출처의 조건에서 생산, 유지된다. 출처는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조직적 실체와 기능, 업무 같은 활동 근거로서의 실체를 갖는 기능적 출처로 나눌 수 있다. 출처는 존속중인 조직이나 기능이라는 배경적 요인으로 기록을 대상화한 것이다. 이는 전략적 기록화에 부합하는 기록을 획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기록에 담긴 특정 정보에서 추출되는 '주제'를 통해서도 기록을 대상화할 수 있다. 주제는 기존 근대적 기록 평가선별에서는 출처단위 생산 기록에 담긴 특정 인물, 사물, 현상 등 이른바 정보 가치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기록화 전략에서 주제는 다중 출처를 포괄하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전략적 기록화에 부합하는 기록을 찾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폭넓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개별 출처를 넘는 전 사회적 범위에서의 기록화 대상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의 주제는 전략적 기록화와 다수 출처의 기록을 연계시킴으로써 거시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기록화 계획에 부

---

관한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07이 있다.

합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쿡은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개념적 산물인 주제를 근거로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쿡의 요점은 개념적 산물인 주제는 그 임의성으로 인해 실재하는 기록을 획득하는데 있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거시평가가 실재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러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sup>17)</sup> 쿡의 지적대로 개념적 산물로서의 주제는 추상적이며 임의적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주제는 전략적 기록화를 대전제로 하여 한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상적이고 논리집약적인 서사 형식의 기록화 전략 내용에 부합하는 기록을 다양한 출처의 경계를 넘어 포괄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기록집합을 식별하여 묶어주는 개념적 수단인 것이다.

출처나 주제 외에 기록 유형도 제한적으로나마 기록 획득을 위한 대상화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조직화된 실체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들은 생산 목적에 비추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유형구분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중요도나 특성을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이는 근대적 기록관리나 현용기록 관리분야에서는 이미 익숙한 것이었는데 이른바, 정책과일, 케이스파일, 서무과일 등으로 유형 구분한 서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주제에 관계없이 기록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개괄적인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정보유형 또한 전략적 기록화의 대전제 하에 출처나 주제와 별개로 또는 특정 출처나 주제 내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는 기록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동일 유형의 정보를 담은 케이스파일은 많은 분량의 기록을 설명 가능한 기준으로 질서 있게 선별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화 수단이다.

출처, 주제, 유형 등 기록 객체적 대상화와 다른 관점에서, 기록물을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대상화할 수도 있다.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 또는

---

17) Cook, Terry,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Vol.34, 1992, pp.181-91.

그 이전단계에 이루어지는 선행적 평가는 기록 생산 배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록물 자체가 평가의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반면 사후 평가는 생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평가는 동일한 경향을 지닌 기록생산의 유형적 요인을, 사후평가는 생산된 기록물 개별적 특성을 평가한다.

기능, 업무기반 평가를 통한 기록물 감축정책인 네덜란드의 피벗(PIVOT)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 생산 배경은 구체적인 기록에 담긴 개별적인 정보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평가결정의 비일관성이라는 혼선을 막고 사전에 정의된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논리적이고 일관된 선별, 질서 있는 기록 감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피벗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능 또는 업무에 기반한 평가선별은 그같은 장점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역사학자들과 고문서학자들 그리고 캐나다 전통주의자들은 기능적 우선순위가 개별 기록의 가치와 불일치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적하면서, 기록 내용을 보지 않는 평가가 결과적으로 중요기록이 멸실될 것이라고 반대하였다.<sup>18)</sup>

그렇지만 기록화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기록 생산 배경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평가와 생산된 결과로서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평가는 기록화 가설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는 기록을 찾는 데 필요한 선택의 문제이다. 다량의 기록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대의 기록 환경에서 배경 평가는 타당하고도 불가피하다. 또한 개별 기록의 내재적 가치 또한 원천적으로 간과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전 사후 평가는 그 전제가 어디까지나 전략적 기록화이며 그 내용에 부합하는 기록의 선별, 획득을 위해 채택하는 도구를 통해 실행된다. 즉 동일한

---

18) Horsman, Peter, "Appraisal on Wooden shoes, The Netherlands PIVOT project," *JANUS*, 1997, 2, pp35-41. 제목의 '나막신'은 네덜란드의 특산물로서 빗물(많은 기록)은 막아주지만 소음 때문에 교회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전통적 문서학이나 역사학의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기록에 대해 배경적 요인에 따른 기록물 보유기간과 내재적 정보 가치의 평가가 모순 없이 모두 실행될 수도 있다.<sup>19)</sup>

결론적으로 기록화 전략에서 사전적 평가선별과 사후적 평가선별은 전략적 기록화의 대전제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기록 획득을 위한 상대적 특수성의 조건 선택 문제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록 획득 수단은 대상화된 기록 객체 조건과 시점을 조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출처, 주제, 정보유형을 사전과 사후 평가선별로 조합하면 여섯 가지의 유형이 나온다. 각 유형들은 특성에 따라 전략적 기록화에 부합하는 기록의 식별과 획득을 지원하는 목표 지향적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상에서 설명한 유형별 기록 선별 수단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형별 기록 획득수단

구분	유형설명	특성
유형1	출처별 배경 평가	특정 기능, 업무, 위계적 조직의 기록을 대상으로 지속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거시적 관점의 일괄 선별 수단
유형2	출처별 기록 평가	특정 기간에 속한 기능, 조직의 기록을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특화된 요인에 근거한 한정 범위의 일괄 선별 수단
유형3	주제 배경 평가	사안, 사건 등 특정분야 생산 예정 기록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선별 수단
유형4	주제 기록 평가	특정 사안, 사건 등 특정분야 생산 기록을 대상으로 역사적 평가가 진행된 사안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의 선별 수단
유형5	정보유형 배경 평가	사안 사건 등 특정분야 생산 예정 기록 정보유형을 대상으로 하며 세분화된 유형에 따라 모든 기록물에 보편적으로 적용
유형6	정보유형 기록 평가	특정 사안에 대한 생산된 기록정보 유형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맥락에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음

19) 모 지방자치단체 사업 인허가서류 중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업 인허가서류는 업무 활용기간 만큼 보존하지만 이 문서건의 경우 특징인 개별적 가치도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 업무가치는 평가시점과 상관없다. 반면 특징인의 가치는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한다. 양자의 가치 평가는 가치 기준, 선별방법과 시점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유형구분은 전략적 기록화를 대전제로 적절한 후속 실행 방법의 이행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기록화 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기록을 획득하는 것은 목표로 하여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위의 기록획득 유형구분인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기록획득수단은 국가적 평가선별 시스템 그리고 기타 다양한 수집 프로그램의 하부체계를 구성한다.

#### 4. 지속가능한 제도 : 규범화된 전략과 정책

‘아카이브(archives)’라는 말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뜻에서 한국에서는 ‘보존기록’으로 일본에서는 ‘기록사료’로 번역되어 왔다. 그런데 아카이브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카이브’의 어원은 그리스어에 유래한 것으로 ‘시작’, ‘기원’, ‘통치권’, ‘관공서’, ‘관청’ 등을 의미한다.<sup>20)</sup> 듀란티는 아카이브에는 공적 신뢰라는 관념이 들어 있는데 이는 로마시대 이래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하였다.<sup>21)</sup> 서구에서 아카이브는 통치 권력이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가진 권리의 근거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주의 이후 동유럽에서 진행된 국가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가 사회주의 몰락 후 민족주의의 부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sup>22)</sup> 데리다는 저서 『아카이브 열병(Archives Fever)』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통제 없이는 즉, 기억에 대한 통제 없이는 그 어떠한 정치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유명한 글을 남겼다.<sup>23)</sup>

20)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471쪽.

21) Duranti, “The Concept of Appraisal,” 오향녕 역, 앞의 책, 279쪽.

22) Peterson, Trudy, “The Nasty Truth about Nationalism and National Archives,” 제5차 동아시아 기록보존협의회(EASTICA) 총회 발표문(2001. 9. 19. 서울). 이상민 역,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4호, 한국기록학회, 2001, 197-112쪽.

미국에서 아카이브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밀접하다. 미국에서의 기록관리 전통은 크게 역사기록관리의 전통과 공공기록관리의 전통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공공기록관리 전통은 영국 식민지시기부터 시작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담보하는 공적인 기록보관소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었다.<sup>24)</sup> 미국 정부가 아카이브를 어떻게 보는지는 수도 워싱턴 DC의 의회와 백악관의 사이에 1930년대 건립된 국립기록관리청 건물 입구에 새겨진 경구 ‘끊임없는 감시가 자유의 대가이다(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의 아카이브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누그러들지 않을 자신감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하였다.<sup>25)</sup>

이처럼 ‘아카이브’에는 ‘보존기록’이라는 대역어로는 충분히 답을 수 없는 사회 역사적 맥락이 담겨 있다. 저장된 기억으로서의 문화적 성격 이전에 전제정치든 민주정치든 통치의 권위와 그 증거를 공적으로 보존된 기록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것이 ‘아카이브’에 담긴 의미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구미의 공공 아카이브의 정책적 지향 예컨대 국가기록원이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보존기록을 선별하여 수집하는 양상은 이런 아카이브에 담긴 의미의 본질적 맥락을 도외시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

약 15년 전 한국에 본격 구미의 보존기록학이 도입되면서 대두된 전문직 관념과 관리 방법론은 한국 공공기록 관리의 전기를 이루는 중요

23)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472쪽.

24) O'tool, Jams 저, 이승억 역, 『기록의 이해(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진리탐구, 2004, 56-61쪽.

25) 미국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자신의 대통령도서관 개관식에서 한 연설중 일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도서관과 미래 모든 대통령들의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가 학문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 제정 이전에도 설립 30여년 된 ‘정부기록보존소’가 있었다. 법률 제정, 정통 학문의 도입과정에서 정부 기록물의 단순 보관소인 정부기록보존소가 비로소 ‘내셔널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간과된 면도 있다.

영국의 국가기록원은 「기록 수집 및 처분 정책」에서 ‘영구보존을 위한 공공기록의 선별 목적은 국가적 기억(national memory)의 보존이라는 국가기록원의 중추적 고유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26)</sup> 이는 단순한 수사적 언명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국가기록원은 기록평가선별에서 생산자를 강조한 젠킨슨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현실 제도에서는 국가기록원이 각 기관을 사실상 지도하였다. 이는 출처와 주제, 기간, 기록유형 등을 포괄하는 지침인 ‘실행형선별정책(OSP : Operational Selection Policy)’을 통해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OSP의 본질적 중요성은 내용은 물론 그것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것의 효력에 있다. OSP는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초안을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의견을 공개 수렴하는 일종의 사회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다. OSP는 특정 시기의 정부기관, 정책 주제, 기록물 유형 등 포괄적이며 각각의 내용마다 특화하여 제정한다. 하나의 지침으로서 OSP에 기술된 기록이 생산 보존되는 곳에서는 해당 기록의 평가선별을 OSP의 기술대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공공기록관리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목적의식적인 계획적 기록화를 규정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당부분 법의 내용은 생산, 편철, 등록, 보존매체 수록, 보존서고 운영 등 현용기록과 보존기록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선별에 관한 중요 규정으로 보존기간 책

---

26) The National Archives, “Acquisition and Disposition Strategy,” 2007,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cquisition\\_strategy.pdf](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cquisition_strategy.pdf)

정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만들고 각 기관이 보존기간 책정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준칙」 규정이 있다.<sup>27)</sup> 그런데 준칙은 현재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운영에 관한 명확한 하부 규정이 없고, 각 부처에서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때 활용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상한 점은 준칙 운영이 이런 실정이지만 기록학계나 기록관련 전문가 단체에서의 문제제기는 물론 연구 주체로서의 관심도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공공기록관리법 체제가 본질적으로 보존기록 즉, 국가적 아카이브에 관한 법제인지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행 법령에서 국가적 아카이브가 어떻게 정의되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는가에 관해 물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현행 국가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공기록관리법은 국가적 보존기록 획득에 포커스가 있는 국가 아카이브에 관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법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국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기록을 규정하고 이것의 획득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위가 보장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없다면 이러한 권위에 의해서나 성립 가능할 국가적 기록의 존폐에 개입할 권한 역시 미약하거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취약함은 국가기록원의 간섭을 꺼려하는 각 공공기관들과 학계의 무관심이 결합된 모한 상황에서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다.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이 한국보다 늦은 일본만 하더라도 1950년대부터 각 성청(省廳)의 기록을 아카이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학계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

27)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다음 규정이다. “단위과 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더구나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부처의 중요기록이 이관되거나,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다.<sup>28)</sup>

한국 공공기록관리제도는 사실상 이전 정부기록보존소 단계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규정만 법률로 격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 제정의 의미를 기존 「사무관리규정」의 기록관리 분야만 분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국가아카이브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여기에 실무 현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 전자기록 시대를 맞아 이제 막 출범한 기록전문직들이 정부기능의 분류나 기록 생산을 위해 개발된 거대 전산시스템의 운영에서 소외됨으로써, 과거 종이기록 시대에 비해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독자적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자들에게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하는 일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대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권한도 온전하게 없이 처리해야 하면서도 보존기록 평가선별로서의 본질은 희석된 그야말로 골머리를 썩는 비본질적 난제로 전락했다.<sup>29)</sup>

---

28) 현재 중앙부처 본부의 상당수 과는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인 30년 보존 이상의 단위과제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부처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현행 법령상 보존기간은 국가기록원과 협의 확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각 부처가 정책기록의 보존기간을 높게 책정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이는 국가기록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한가지 문제는 보존기간 적정화가 정부기능분류나 기록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동기화 문제로 그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9)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기록생산 및 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 하지만 기능분류체계는 안전행정부의 조직부서 그리고 각급기관도 대부분 조직이나 성과담당 부서 소관이다. 국가기록원과 각 기관의 기록전문요원들은 전자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시작점으로서 단위과제의 기능분류체계와 접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기록관리 부서나 기록전문직이 재량권을 갖는 독자적 분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미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적 기록관리 체제의 본령은 정보시스템의 코드나 데이터의 운영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것은 집약된 정책적, 행정적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균형의 영역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사항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구미는 아카이브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내셔널 아카이브의 역사적 전통과 관행을 통해 어느 정도 그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의식과 전통, 그리고 관행이 단절된 것이든 원래 없었던 분명 현존하지 않는다. 공공기록관리법 이후 체제에 대한 인식에 이러한 요인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의 주제인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하는 기록 평가선별과 관련하여 현 공공기록관리법 체제 제1기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다음 시기를 열기 위한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록관리법 체제 제2기는 관리 실무에서 거시정책으로, 기관단위 기록에서 사회적 기록으로, 기록물 보관소에서 국가아카이브로서의 위상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가기록화 전략」과 「국가 보존기록 수집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문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기록화전략」은 앞서 2장에서 서술한 전략적 기록화 범주를 토대로 공론장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록화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이를 통해 기록화 대상인 ‘동시대의 대표 척도로서의 정책, 사건, 관계, 상호작용 등 현상적 실재’, 그러한 척도에 부합하는 ‘보존기록의 물리적, 논리적 위치’에 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 담겨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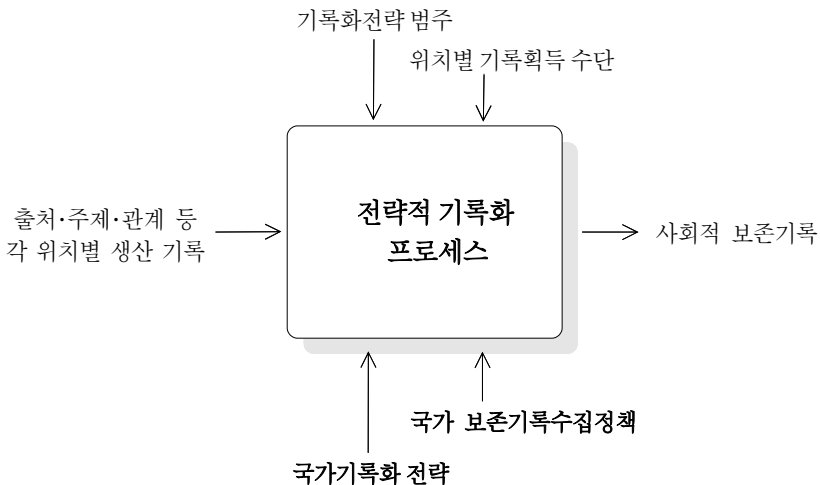
「국가 보존기록물 수집정책」은 기록화 전략을 실재하는 보존기록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수단들을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현행 기록물관리기준표처럼 고유나 공통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스케줄표가 될 수도 있고, 영국 OSP처럼 특정 시기, 특정 출처, 사건, 정책에서 생산된 기록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기록 선별기준 지침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본질은 공공기록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기록원의 권한과 의무를 근거로 「국가기록화 전략」의 대전제에 의해 통제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획득 수단을 기술하는 문서라는 점이다.

「국가 보존기록 수집정책」 또한 「국가기록화전략」과 마찬가지로 또한 국가 아카이브의 주관과 지원 하에 전문가 집단의 연구를 반영하고 각 파트너 기관,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포함하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시대의 전략적 기록화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록화 전략과 그것을 실행하기위한 정책적 수단이 사회적 합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될 필요가 있다. 2장 및 3장에서 기술한 전략범주와 유형별 수단은 「전략문」과 「정책문」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문」과 「정책문」은 동시대의 기록화 전략을 지속가능한 제도로써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동시대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 개요





## 5. 맺음말

하나의 제도나 시스템은 그 자체 내용만큼이나 그것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할 기록전문가 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이나 조건 역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동시대의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은 전 사회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기록 공동체 전체의 학문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전략적 기록화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논의 영역 세가지를 제안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는 동시대 기록화 전략 도출 분야로, 이는 당대의 사회적 기억을 전략적 기록화 가설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제적 연구와 사회 공론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기록화 전략문은 사회의 공통적 이해를 대변하는 아키비스트들의 강령적 문서가 될 것이다. 기록전문가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운동 분파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그리고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에 서기보다는 중립적 관점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동시대의 사회상을 온전히 반영하고자 하는 기록전문가 고유의 특성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록 획득수단의 개발에 관한 분야이다. 이는 전략적 기록화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출처와 주제의 기록을 식별하여 장기적 보존장소로 이송하는 제반 방법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현장 학문으로서의 기록학 고유의 전문화된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기록 생산 배경, 유형별 기록정보, 특정 기록정보의 식별과 평가 등 다양한 사례연구가 두 번째 분야 논의를 내실화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논의의 진전은 첫 번째 영역의 논의가 공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존기록의 획득으로 완성되는 온전한 기록화 절

차가 진행되는데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공공기록관리 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분야이다. 이는 기록전문가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 공론장에서 확인되는 동시대적 가치를 일정한 합의 절차를 거쳐 물리적 시스템으로 이끌어내는 기록전문가들의 역량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권한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일종의 정치적 영역으로 학제간 연구 그리고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국가 아카이브와 기록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록화와 관련한 공유 가능한 비전과 기록에 대한 독보적 전문 지식을 통해 얻게 될 사회적 신뢰가 관건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국가기록원 또는 기타 국가적 정책 문서로 구체화되어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Archival Appraisal Strategy and policy for documentation of Contemporary Society

Lee, Seung Eok

This paper is a discussion on the archival appraisal system that operates to document big events of the society or major public policies. The writer brought up three suggestions; the first is to develop documentation strategy to select archives at the same time it is created. This means that what matters is the scenes contained in the archives, and therefore they must reflect as wide social context as possible, which the writer considered as being caused by the change of thinking on the value of archives. The second is to develop tools to acquire archives that satisfy such strategy. The third is the sustainability of such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cquisition methods. Regarding this point, the writer discussed the problems of current national archival system of Korea.

**Key words :** macro-appraisal,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es acquisition tool, national documentation strategy, national archives acquisition policy